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실증연구: 『인민일보』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민규(여시재)

I.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 核心利益)’개념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각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다이빙궈(戴秉國)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 회의석상에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¹⁾ 그 해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면서부터이다.²⁾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부터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대외정책 행태와 이와 관련된 논쟁에 ‘핵심이익’ 개념이 포함되면서, 내포된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³⁾

최근까지 중국이 보이고 있는 핵심이익 관련 외교적 언사와 행태는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이 2011년에 분석한 공세적 행태의 특징과 우려를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⁴⁾ 첫째,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 개념을 공식화하고 있다. 2011년9월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평화발전(中國的和平發展)』 백서를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범위를 확정 지었고, 외교부 대변인 외에 후진타오(胡錦濤), 원자바오(溫家寶), 시진핑(習近平) 그리고 리커창(李克強) 등 최고지도부들의 연설을 통해 더욱더 공식화 시키고 있다.⁵⁾ 둘째, 중국은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5-6년에 발발한 제4차 대만해협위기 사건은 중국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 최근 10년 ‘해양권익’(海洋權益) 수호를 빌미로 남중국해(南海) 등지에서 보이고 있는 공세적 대외 정책 언행 역시 이러한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⁷⁾ 셋째, 중국은 쟁점이 있는

1)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3, 292-293쪽.

2)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two sides agreed that respec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is extremely important to ensure steady progress in China-US relations.” See “U.S.-China Joint Statement”,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November 17, 2009,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2016.11.20.).

3) See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Spring 2013, pp.17-20.

4)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34, February 22, 2011, p.34, <http://www.hoover.org/research/chinas-assertive-behavior-part-one-core-interests> (검색일: 2016.10.28.).

5) 章迪禹, 「中國‘核心利益’之辯」, 『世界知識』, 第19期, 2011, 15-21쪽.

6) ‘대만’문제는 대표적인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이다. 제4차 대만해협위기 사건은 비록 중국이 ‘핵심이익’을 규정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기 전에도 사건의 전개 상황에 따라 무력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핵심이익’으로 규정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만 문제 관련 무력사용 가능성에 대한 장쩌민(江澤民)의 주요 발언은 아래 문헌 참고 바람. 『江澤民文選(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2006, 85, 286, 419-422쪽.

7)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 특히 군사적 전략과 행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 바람.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Can China Defend a

국제적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핵심이익 범주에 넣고 있다. 즉, 핵심이익의 외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핵심이익 개념의 내용과 적용범위 역시 수정을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이래 핵심이익을 ‘주권’(主權), ‘안보’(安全) 그리고 ‘발전이익’(發展利益) 등 세 가지로 재규정하였다.⁸⁾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지속적인 재규정과 외연의 확대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에 따른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논쟁이 되기 시작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國家利益)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더욱 세부화 시켜 ‘핵심이익’까지 규정하게 되었다.⁹⁾ 국가이익이 점차 중국 대외행위의 ‘사상적 근원’(思想根源)이 되면서 미국 혹은 주변국과 국가이익을 사이에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¹⁰⁾ 비록 핵심이익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 ‘핵심이익 확대론’, ‘보수적 핵심이익론’ 그리고 ‘절충론’등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¹¹⁾ 무력사용만이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타협적 태도와 대만(台灣), 티베트(西藏), 신장(新疆)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중국의 급속한 국력신장으로 인해 핵심이익 관련국의 우려를 더욱 초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²⁾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혹은 주변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방안 연구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여전히 몇 명 중국 지도층의 발언과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핵심이익 관련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문제,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釣魚島)문제 그리고 ‘한반도’문제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논쟁처럼 어떤 이슈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추측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¹³⁾ 이번 연구에서는 이

‘Core Interest’ in the South China S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4, No.2, Spring 2011, pp.45-59.

- 8) 바이두(百度)신문 검색 결과 ‘국가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은 2010년 전후부터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주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로, 2010년 3월 7일 중국 외교부 부장 양제츠(楊潔篪)는 제11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을 ‘본국의 핵심이익과 존엄’이라고 하였다. “楊潔篪：中國外交以維護國家主權安全和發展利益以促進世界和平與發展為己任”，『新華網』，2010.3.7.，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07/content_13115174.htm (검색일: 2016.10.28.).
- 9) 章迪禹, 「中國‘核心利益’之辯」, 『世界知識』, 第19期, 2011, 19쪽.
- 10) 張清敏 · 李啟窺, 「中國對外行為的思想根源探析」, 『外交評論』, 第4期, 2011, 14-18쪽.
- 11)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3, 301-305쪽; 중국 학계의 ‘핵심이익’에 관한 논쟁과 연구 현황은 아래 논문 참고 바람. Jinghan Zeng, Yuefan Xiao and Shaun Breslin,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 12) 章迪禹, 「中國‘核心利益’之辯」, 『世界知識』, 第19期, 2011, 20-21쪽; 미국과 중국 간의 핵심이익 충돌과 관련된 연구는 아래 보고서를 참고 바람.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미중관계 시리즈, 2011, 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105069371864.pdf (검색일: 2016.10.28.).
- 13) 남중국해와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 참고 바람. Shai Oster, Andrew J. Nathan, Orville Schell, Susan Shirk, Tai Ming Cheung and John Delury, “What’s Really at the Core of China’s ‘Core Interests’?”, *ChinaFile Conversation*, April 30, 2013, <https://www.chinafile.com/.../whats-really-core-chinas-core-interests> (검색일: 2016.6.25.); Stephanie T. Kleine-Ahlbrandt, Susan Shirk and Wang Yizhou,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ChinaFile Conversation*, May 2, 2013, <http://www.chinafile.com/conversation/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

상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국의 ‘핵심이익’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이슈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고자 한다.

II.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분석 방법

중국의 구체적 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인민일보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①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중국 정부와 엘리트들의 관점과 시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⁴⁾ ② 쑹징한(曾敬涵) 등의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핵심이익’ 관련 108편의 중문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중국 국내 학자들 사이에 ‘핵심이익’ 개념과 이와 연관된 이슈에 대한 많은 토론과 연구는 있지만,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사항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많은 연구가 특정 사건에 의한 것(event-driven)이거나, 주요지도자들의 관점과 발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¹⁵⁾ 즉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중국의 핵심이익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결과가 중국공산당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도 할 수 없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핵심이익’(國家核心利益)을 검색 키워드로 선택하였다. 마이클 스웨인 등 기존 중국의 핵심이익 연구자들은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내용분석 혹은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2000년1월1일부터 2016년 10월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全文)에 대한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은 표면적인 특징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는 파악할 수 없었다. ①2004년부터 ‘핵심이익’거론 빈도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도에는 총 233편에서 거론이 된다. ②‘국가이익’을 키워드로 검색한 것과 비교해본 결과, 2009년을 기점으로 ‘국가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③심지어 2009년,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에는 ‘핵심이익’의 거론 빈도수가 더 많았다. ④2015년과 2016년 동안의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검색된 305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핵심이익’은 외교무대에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거론된 기사가 대부분 이었고,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떠한 맥락에서 국가핵심이익이 거론 혹은 사용되는지 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이하와 같은 단위(units)화를 기준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핵심이익’ 혹은 ‘국가의 핵심이익’(國家的核心利益)을 코딩단위(coding units)로, ‘단락’을 배

m-good (검색일: 2016.6.25.); Caitlin Campbell, Ethan Meick, Kimberly Hsu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 May 10, 2013, <http://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s%20Core%20Interests%20and%20the%20East%20China%20Sea.pdf> (검색일: 2016.7.10.);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래 논문 참고 바람. 김흥규,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동북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3, 295-297쪽.

14) 張清敏 · 李啟鵬, 「中國對外行為的思想根源探析」, 『外交評論』, 第4期, 2011, 6쪽.

15) Jinghan Zeng et al.,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경단위(context units)로 측정을 하였다.¹⁶⁾ 분석 과정에서 ‘단락’ 단위로 분류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일 경우에는 ‘통사단위’(syntactical units)를 ‘복수의 단락’ 혹은 ‘문장’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락’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번 연구의 목적이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혹은 문제)를 밝혀내는데 있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test)를 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빈도(수)와 백분율 등의 묘사(description)를 통하여 설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reliability)측정과 관련하여, 이번 분석은 독자적으로 추진된 연구이므로 ‘종적 신뢰도’(within)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연습단계에서 시간 순으로 138편중의 25%에 해당하는 34편에 대한 코딩을 일주일의 시간차를 두고 2번 실시하였다. 정식코딩단계에서는 40%에 해당하는 55편의 기사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역시 일주일의 시간차를 두고 2번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0.909(%)를 나타내었다.¹⁷⁾

Ⅲ.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수와 경향

1.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거론 빈도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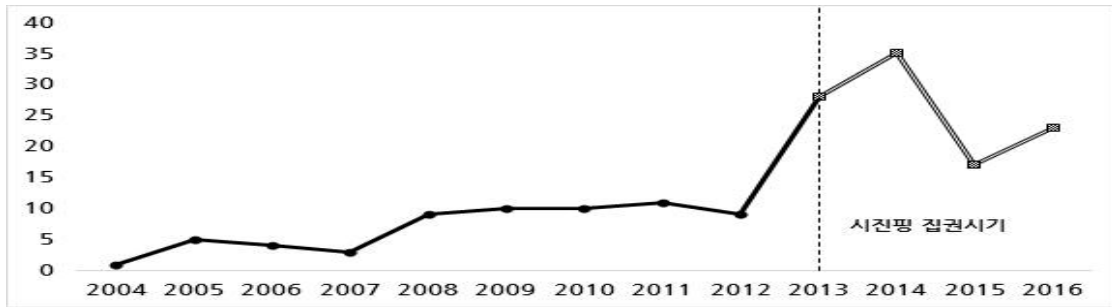
‘국가핵심이익’을 키워드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인민일보 전문을 검색한 결과, 2004년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키워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에 총138편의 기사에서 165번 거론이 되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평균 7번만 거론이 되다가, 2013년에 28번으로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연 평균 26번 거론이 되고 있다. 2015년에 17번으로 빈도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6년 10월27일 기준 23번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비해, 시진핑 집권 3년 10개월 동안의 빈도수가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총62번 거론이 된 것에 비해, 2013년에서 2016년 10월27일 사이에 총103번 ‘국가핵심이익’이 거론되었다.¹⁸⁾ 이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집권 시기 후진타오 등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이 거의 인용되지 않은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시기 시진핑의 국가핵심이익 관련 발언은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연도별 인용 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42%)을 제외하고, 연평균 23%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양적인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 시진핑 집권 시기 국가핵심이익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키워드 기준)

16) 인민일보 전문에 대한 분석결과,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는 대부분 ‘~와 관련’(事關, 關係, 涉及)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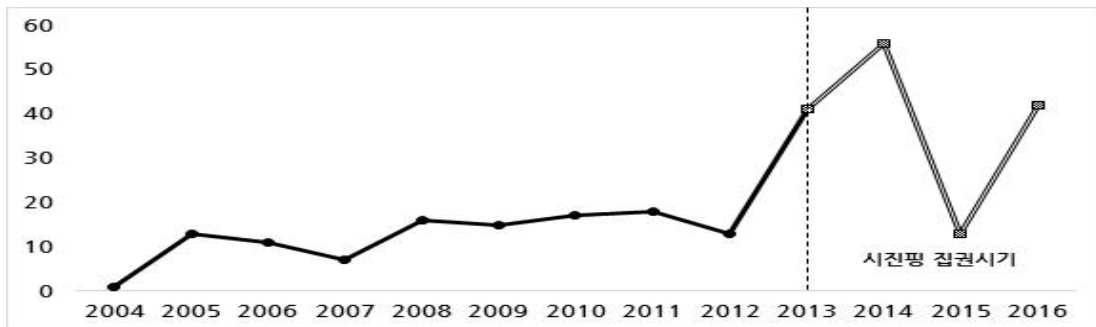
17) 백분율 신뢰도 검사 결과 0.909(%)가 나왔기 때문에, Scotti's Pi와 Cohen's Kappa 공식을 통한 신뢰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8) 중국의 ‘당-국가’(party-state)체제 특성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임명 시기는 다르다. 시진핑의 경우 2011년 11월에 총서기가 되지만, 국가주석은 2013년 3월에야 임명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민일보에서의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의 전반적인 경향 파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잡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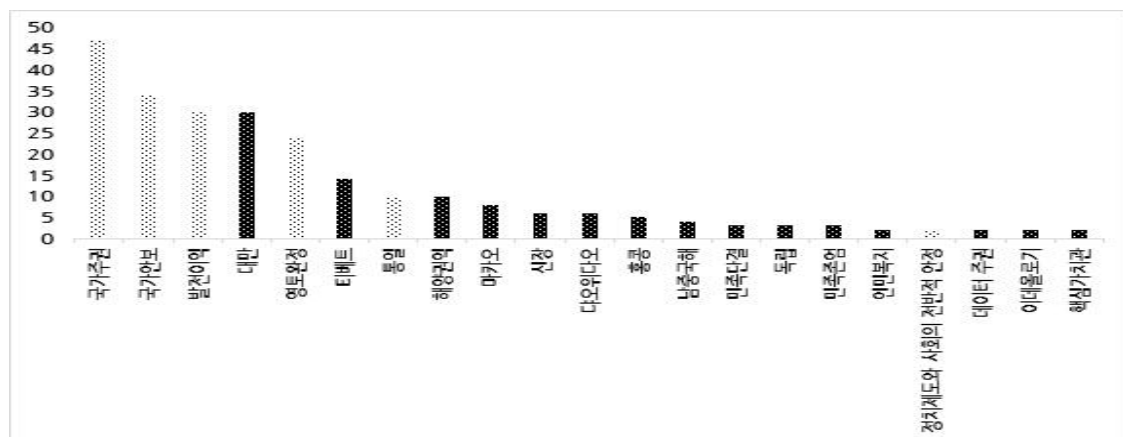
국가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는 상기 기간 동안 총138편의 기사에서 총263번 거론이 되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13번 거론이 되다가, 2013년 41번으로 증가하였고, 이때부터 연 평균 38번 거론이 되고 있다. 이 기준의 빈도수 역시 2015년에 13번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다가 2016년 10월27일 기준으로 42번으로 다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후진타오 집권 시기 동안 총111번 거론된 것에 비해, 시진핑 집권 3년 10개월 동안 이미 총152번 거론이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양적인 증가는 비단 시진핑 집권 시기 국가핵심이익(혹은 핵심이익)이 중요한 개념이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핵심이익 관련 이슈와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2] 국가핵심이익 거론 빈도(이슈기준)



한편, ‘핵심이익’의 거론 빈도수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후진타오 집권2기 때부터 핵심이익 개념을 중시하기 시작하지만, 국가핵심이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이익’은 시진핑 집권시기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심이익 개념은 후진타오 집권2기 2년차인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 분석이 가능한 국가핵심이익 개념은 시진핑 집권1기 1년차인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과 적용 범주를 계속해서 수정 및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국가핵심이익 이슈는 편수에 상관없이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 당 거론 빈도수를 조사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2010년 전후부터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가 국가핵심이익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시진핑이 중공중앙 총서기에 임명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양권익’이 거의 매년 거론되기 시작한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총 7번 거론이 되는데, 그 중 5번은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이익’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2014년 ‘남중국해’문제와 2016년 ‘동중국해’(東海)문제가 국가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양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가 국가핵심이익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다가, 2012년부터는 ‘해양권익’, ‘동중국해’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문제 등 좀 더 큰 주제에서 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2008년 전후부터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백서 기준)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들과 이슈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2011년부터 ‘토지’(土地)문제를 시작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 범주의 이슈로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상업기밀’(國有大中型企業的核心商業秘密), ‘데이터 주권’(數據主權), ‘정보강역’(信息疆域), ‘인민복지’(人民福祉), ‘과학기술혁신’(科技創新) 등이 있다.

여섯째, 2016년 국가핵심이익 범주에 새로 추가된 안보관련 이슈로는 앞서 제기한 ‘동중국해’문제 외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와 관련된 ‘한반도’문제 등이 있다.

IV. 중국의 구체적인 국가핵심이익 이슈와 특징

각각의 이슈들은 여러 방면의 국가핵심이익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핵심이익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점이 있다. 한 예로 ‘해양권익’같은 경우 ‘주권’, ‘안보’, ‘발전이익’ 세 가지 포괄적 주제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만’문제 같은 경우 앞서 제기한 것처럼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많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특정이슈마다 논쟁의 중점 사항이 있고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 최대한 명확한 분류는 이슈별 문제해결 방안 연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중국의 평화발전』에서 규정한 중국의 핵심이익 기준(포괄적 주제)에 따라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1]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관련 이슈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①티베트 ②마카오 ③신장 ④홍콩 ⑤독립 ⑥역사	①한반도 ②영공안보 ③조국평화	①다오위다오 ②남중국해 ③동중국해 ④변경권익 ⑤해양권익	①대만	①핵심가치관 ②민족단결 ③민족존엄 ④이데올로기 ⑤파룬궁 ⑥국가정권 ⑦대중문화	①토지 ②데이터 주권 ③정보강역 ④국가현대화 ⑤인민복지 ⑥핵심상업기밀 ⑦과학기술혁신

1. 국가주권

‘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그리고 ‘홍콩’(香港) 문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문제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거론된 이래 2012년과 2013년만 제외하고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티베트’문제와 관련하여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외국 방문과 방문국가 지도층과의 회담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민감해 하는 구체적인 이슈이다.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티베트’문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하는 기사들에서 대부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대만’문제 포함). 한편, 이 기사들을 통해 정협 소속의 중국경제사회이사회(中國經濟社會理事會)와 정협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中國宗教界和平委員會)의 역할(‘신장’문제 포함)이 중시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마카오’문제는 2009년 마카오 특별 행정구 기본법 실시 10주년 행사 때 처음으로 거론이 되었다. 2016년 건국67주년 행사에서는 ‘홍콩’, ‘대만’ 문제와 함께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港治), ‘오인치오’(澳人治澳)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제시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장’문제는 총6번 중 5번 모두 앞서 설명한 정협과 중국경제사회이사회와 중국종교계평화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론이 되었다.

‘홍콩’문제 역시 ‘마카오’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2012년 6월 29일에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 사령관 쟡스보(張仕波)와 왕정보(王增鉢) 정치위원의 글이 실린 점이다. 이 글에서 이들은 국가핵심이익(‘홍콩’)의 수호가 군대주둔의 근본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국가안보

‘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영공안보’(領空安全)와 ‘한반도’문제 등이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한국 국내에 존재했었다. 정징한 등의 연구에도 의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1.85%의 중국학자들도 ‘한반도’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²⁰⁾ 하지만, 인민일보에 대한 분석결과, 2016년 7월까지의 ‘한반도’문제가 국가핵심이익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3. 영토완정

‘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해양권익’,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변경권익’(邊疆權益)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이슈 중 ‘변경권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양영토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 중에서 ‘해양권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의 ‘해양강국건설’(海洋強國建設)의 맥락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양자원개발능력 제고’, ‘해양경제 발전’, ‘해양생태환경 보호’ 등의 노력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은 비록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하겠지만,

20) Jinghan Zeng et al., “Securing China’s Core Interests: the State of the Debate in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91, No.2, 2015, p.261.

정당권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할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중국해’문제는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1편의 기사에서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양권익’의 맥락에서 거론하였고, 2014년에는 ‘남해각방행위선언’ 문제가 ‘해양권익’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문제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총 6번 거론이 되는데 그 중 3번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8월 21일 기사에서는 일본육상자위대의 미 해병대 ‘섬 탈환 작전’ 훈련 참가와 일본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를 ‘미일안보조약’(The U.S. -Japan Security Treaty)에 적용시키려는 의도를 비판하였고; 2012년 12월 3일 기사에는 미국 참의원의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적용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27일 기사에서는 중국 정부의 ‘동해방공식별구역’(東海防空識別區)에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정책은 국가핵심이익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해양권익’과 ‘변경권익’ 투쟁 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016년 7월 16일 기사에서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여 ‘유리유거유절’(有理有據有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군사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국가통일

‘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대만’문제가 있다. ‘대만’문제는 2004년에 처음 거론된 이래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국가핵심이익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의 맥락에서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 세력의 의도와 행동을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2008년과 2009년 기사에서는 조국의 ‘통일’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양안관계의 발전 추세 파악은 물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외국 의회, 외국 정부와 의원 그리고 민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함을 함께 강조하였다. 2010년과 2013년 기사에서는 중앙정부의 대 대만 공작의 국정방침은 민족의 근본이익과 국가핵심이익을 실현한 것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9월 17일 기사에서는 중국종교평화위원회의 ‘대만’문제 뿐만 아니라 ‘티베트’, ‘신장’ 그리고 ‘파룬궁’ 등 문제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015년 7월 10일 기사에는 ‘국가현대화’와 ‘조국평화통일’의 맥락에서 ‘홍콩’, ‘마카오’문제와 함께 ‘대만’문제가 거론되었다. 2016년 9월 30일과 10월 1일 기사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국양제’, ‘항인치항’, ‘오이치오’ 등의 ‘독립’, ‘국가주권’, 그리고 ‘영토완정’ 문제와 독립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의 맥락에서 ‘대만’문제가 거론되었다.

5.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핵심가치관’,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중문화’ 그리고 ‘민족단결’과 ‘민족존엄’문

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민족단결’문제는 제일 먼저 거론이 되는데(2009년),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1년 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데 전통을 드높이고, 애국애교 교육을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리더십을 옹호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민족단결’과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통용언어와 문자의 전파 및 보급은 ‘민족단결과 국가통일’, ‘국가주권과 민족존엄’의 맥락에서 국가핵심이익을 구현하는 전략적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핵심가치관’은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한 번씩 거론이 된다. 2010년 8월 27일 기사에서는 ‘대중문화’건설 강화와 ‘핵심가치관’의 확립은 국가핵심이익 및 자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공통된 가치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4월25일 기사에서는 ‘핵심가치관’을 ‘주권안보’, ‘영토완정’, ‘기본제도’와 함께 국가의 핵심이익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략적 마지노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국방과 군대는 최종역량임을 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서방 적대세력에 의한 중국의 서구화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거론이 되었다. 2013년 10월22일 기사에 서방 적대세력에 의한 중국의 서구화와 사상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전략은 변화지 않을 것임으로 ‘이데올로기’ 영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2015년 9월 20일에는 좀 더 완화된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가 된다. 2015년 기사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와 국가핵심이익 영역과 일환에 외국자본의 침투를 금지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데올로기’ 속성은 있지만 국가핵심이익과 연관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조건부 유입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권’은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의 국가보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기사에서 ‘국가주권’, ‘통일과 영토완정’, ‘인민복지’, 그리고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개념과 함께 거론되었다.

6.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토지’문제, ‘데이터 주권’, ‘정보강역’, ‘인민복지’,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등이 있다. 2011년 12월 30일 기사에서 현재의 각종 경제, 사회와 정치문제 등은 모두 ‘토지’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가토지감찰기구의 지위와 사명은 국가핵심이익과 중화민족의 장기이익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은 2013년 4월 9일 기사에서 거론이 되는데, 국민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은 국가핵심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기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데이터 주권’은 2014년 5월 9일 정협 주석 위정썩(俞正声)이 주최하는 당외 인사 주제 좌담회에서 쥘싼썩서(九三學社) 중앙 부주석 라이밍(賴明)에 의해 건의되었다. 라이밍은 빅 데이터 등의 현대기술의 응용방면을 국가 전략화하고, ‘데이터 주권’을 국가핵심이익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21일에는 데이터와 정부 거버넌스에 관한 기사가 또 실리기도 하였다.

‘정보강역’은 중공허난성위원회 당교의 썩루이한(薛瑞漢)에 의해 제기가 되었다. 그는 2014년 4월 17일자 인민일보에 인터넷 공간은 국가주권이 확장된 새로운 강역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정보 보안을 국가안보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정보강역’을 국토강역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민복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안전법 제2조의 국가보안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국가보안에 대한 정의는 국가핵심이익과 기타 중대이익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혁신’(科技創新)은 중국과학원의 커정옌(柯正言)에 의해 제기가 되었다. 그는 2015년 7월 5일 기사에서 유인 우주비행, 위성항법, 데이터 안보, 선진핵에너지, 심해자원개발 등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난관을 극복하고 협동과 혁신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부분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고, 국가핵심이익, 국방안보와 장기발전 등과 관련된 전략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영역의 핵심부분을 장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V. 결론

이번 연구는 중국의 구체적인 ‘핵심이익’ 이슈(혹은 문제)를 분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와 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서 2016년 10월 27일 사이에 총138편에서 165번 거론이 되었다. 2013년을 기점으로 그 빈도수가 급증하는데, 이를 통해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비해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이익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핵심이익 이슈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상기 기간에 37개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가 총263번 거론이 되었다. 이 역시 2013년을 기점으로 그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이익이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발견은 ‘핵심이익’을 키워드로 한 분석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즉,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 내용과 적용범주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포괄적 주제와 구체적 이슈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대만’, ‘티베트’, ‘마카오’와 ‘신장’ 등 ‘국가주권’과 ‘국가통일’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 검색이 되었다(2009년의 ‘민족단결’ 제외). 포괄적 주제에 속하는 개념 역시 2008년도에 거론된 ‘발전이익’을 제외하곤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개념들이 주로 거론이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개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이 포괄적 주제에 속하는 구체적 이슈들도 제시되기 시작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포괄적 주제에 포함되는 이슈들뿐만 아니라,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과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주권’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티베트’, ‘마카오’, ‘신장’, ‘홍콩’ 그리고 ‘독립’과 ‘역사’문제 등이 있다. ②‘국가안보’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영공안보’, ‘조국평화’, ‘한반도 문제’ 등이 있다. ③‘영토완정’ 국가핵심이익에 속하는 이슈에는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변경권익’, ‘해양권익’,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 등이 있다. ④‘국가통일’ 국가핵심이익에는 ‘대만’문제가 대표적이다. ⑤‘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핵심가치관’, ‘민족단결’, ‘민족존엄’, ‘이데올로기’, ‘파룬궁’, ‘국가정권’, ‘대

중문화' 등의 문제들이 포함이 된다. ⑥'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는 '토지', '데이터 주권', '정보강역', '국가현대화', '인민복지', '중대형 국유기업의 핵심 상업기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등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국가핵심이익'과 이와 관련된 이슈는 이미 다양하며, 그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 국가핵심이익과 이와 관련된 이슈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거론이 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상의 구체적인 이슈(혹은 문제)들이 공식적인 '국가핵심이익'인지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포괄적 주제별 구체적 이슈들이 누구에 의해 주장이 되었고, 거론된 전후로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또 다른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중앙선전부 代管, 光明日報) 등에는 어떻게 주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민일보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한반도'문제는 이미 '국가핵심이익' 혹은 관련된 이슈로 거론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한반도'문제를 '국가핵심이익'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러 방면의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인민일보에 '국가핵심이익'으로 거론이 된 점은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화된 이 시점에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국가핵심이익'으로 공식화 하였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대 중국 정책의 전면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